

초유의 '4조1천억 감액'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673조 규모...사상 첫 야 주도 의결
비서실·검찰 특활비 등 전액 삭감
광주·전남 증액 전무...현안 '빨간불'
시·도 "핵심 사업 추경 반영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정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 예산안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 예산도 대폭 감액된 채로 통과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은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으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건 조율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내려졌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2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원은 고교 무상

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고, 법적 의무 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은 기금 운용 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등을 포함한 1조8000

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조1000억원을 복원하고 9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 등 협상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관련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다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감액된 정부 예산안이 변동없이 통과되면서 광주·전남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반영하겠다고 하겠지만, 핵심 현안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게 됐다.

광주시의 경우 이번 예산과 관련 전체 시 예산안 중 주요 7개 사업과 관련해 3345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1410억 원만 반영했다. 주요 7개 사업 중 광주시의 요청안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등 5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시급한 사업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7개 핵심사업은 광주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만큼 꼭 증액을 해야 한다"면서 "추경때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국비 8조8928억원을 확보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총 64건의 사업, 최소 3000억원 이상의 국비 증액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서 꼭 호남권 SOC사업 등 민생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증액이 반영되길 바랐는데 안됐다"며 "추경때 반영 되도록 기재부 및 국회 방문을 이어가는 등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노병하·오지현 기자

국힘 내부 '윤 탄핵 부결' 당론 이탈 조짐 확산

조경태 "즉시 해야 외쳐 달라"
김상욱 "14일 탄핵 표결 찬성"
김근식 "소장과 등 생각 바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야나 탄핵 찬성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등 '이탈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해야 하며 늦어도 이번주

토요일 오전까지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당 중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야 된다"며 "즉시 하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탄핵안이 토요일 예정돼있다"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하야 시점을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받아들여도 노력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탄핵안이 오기 전에 즉시 하야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혼란과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했다. 또 "(하야가)탄핵보다 더 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탄핵은 길게 5-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러면 국민적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연장된다"며 "탄핵보다도 빠른 하야가 국민적 갈등과 국민들의 피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표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 "개인적인 입장에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상욱 의원의 탄핵 찬성 기자회견에 대해선, "그런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차마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2의 6·29 선언같은 역사적 결단이 우리 당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스스로 주도권을 잡아야만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고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탄핵 찬성 흐름에 대한 말도 꺼냈다.

그는 "주말을 지나면서 이른바 소장파와 중립지대 의원들이 점차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울경 지역에서 도 상당 부분 지역구 민심이라는 걸 거스를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영록 "한·한 국정운영 위험... 헌법 맞는 조치는 탄핵"

"국민, 위임 안해...조기퇴진론 우려"
"민생 안정...내년 본예산 신속 집행"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는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른바 '한·한 공동국정운영'에 대해 "명백한 위험적 조치로 헌법에 맞는 조치는 탄핵"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본예산 신속 집행과 예비비를 활용한 민생예산 추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고 "여당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주장하면서



소위 '한·한 공동 국정 운영'을 얘기하는데 이는 국민이 원하지도 위임하지도 않는 명백한 위험적 조치"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국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데 지방정부 입장에서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이 조기 퇴진론을 얘기하며 탄핵은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지방정부에서도 합법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만큼 탄핵을 통해 헌법질서를 제대로 세워야 할 때다. 헌법에 맞는 조치가 이뤄져야 지방

정부도 중앙정부를 믿고 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흔들림 없는 도정과 도민제일주의 행정, 복부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안정, 흑한기 취약계층 돌봄 등 내년도 민생 예산의 신속한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그는 "내년 본예산에 출생기본수당, 만원주택,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사업을 많이 확보했는데 비상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예산 신속 집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불법 계엄' 그 후 일주일...

1면서 계속 8일에는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두고 SNS에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퇴 시기를 정하는 것은 헌법 교란 행위로 탄핵만이 헌정회복의 길인만큼 한 대표는 헌법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9일에는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어려울 때일수록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시정

을 운영해야 한다"며 "각 실·국에서도 민생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회사원 정진형(51)씨는 "비상계엄이 터진 날은 놀라서 잠 못 잤지만, 광주는 광주였다. 강기정 시장이 앞장선 덕에 지역의 목소리는 금세 하나로 뭉쳐졌고 일상은 평온했다"며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탄핵될때까지 광주는 외부로는 뜨겁지만 내부는 단결되고 안정된 날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